

판단능력 저하 이후의 금융거래 제한과 대리 절차

은행 거래와 보험금 청구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

2026년 4월 22일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노인의 현금성 재산을 맡아 관리한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10억 원까지다. 신청은 일곱 개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2026년 대상은 750명, 예산은 19억 원이다.

검토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예금주의 판단능력 저하를 직접 다루는 조항이 없었다. 공개된 일부 은행 내부지침에는 고령 고객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가 있었다. 실제 거래 가능 여부는 본인 확인과 적법한 대리권, 후견·신탁 설정, 개별 금융회사의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긴급 의료비 지급에 관한 업권 공통의 공개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소는 거래 제한 기준과 이의제기·대리 절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행일

2026년 8월 13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분량

본문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판단능력이 저하된 뒤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기준과 대리인이 거래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냈나

검토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는 판단능력 저하를 직접 다루는 조항이 없었고, 공개된 일부 은행 내부지침에는 고령 고객 보호를 위한 확인 절차가 있었다. 실제 거래 가능 여부는 본인 확인, 적법한 대리권, 후견·신탁 설정과 개별 금융회사의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긴급 의료비 지급에 관한 업권 공통의 공개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보험계약에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요건에 맞는 사람을 지정한다. 은행별 대리인 등록 절차를 확인하고 계좌·보험·신탁 목록과 관련 서류의 보관 장소를 가족에게 알린다.

한눈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에 들어온 후견 신청 62,538건 가운데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은 157건이었다. 400건에 1건꼴이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치매환자 수는 자료마다 기준이 다르다. 치매역학조사의 **97만 명**은 65세 이상 추정치고, 치매머니 조사의 **124만 명**은 건강보험 진료자료 기준이다. 두 값을 한 줄에 놓지 않았다.
-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었다. 원문 숫자를 나누어 만든 값에는 계산식을 각주에 적었다.
- 자료마다 값이 엇갈린 항목은 본문에 쓰지 않았다. 무엇이 엇갈렸는지는 각주에 적었다.
- 일부 숫자는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랐다. 그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다.
- 어려운 말은 처음 나올 때만 괄호로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차례

1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3
2장	금융재산을 관리하는 네 가지 절차	5
3장	거래 제한 기준과 공개 문서	8
4장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12
5장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14
6장	오늘 할 수 있는 일	17
부록 가	용어 풀이	20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20

1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얼마나 큰 돈이 걸려 있나.

97만 명 치매환자 수 2025년 · 보건복지부	22.25%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023년 조사 · 보건복지부	154조 원 고령 치매환자가 가진 자산 2023년 · 보험연구원
---	--	--

2025년 치매환자는 97만 명이다.¹ 65세 이상 인구의 9.17%다. 보건복지부는 이 수가 2026년에 100만 명을 넘는다고 봤다.

2023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25%였다. 2016년의 9.50%와 비슷하다.

같은 조사에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2.25%였다. 2016년보다 6.17%p 높다.² 2025년 65세 이상 인구 1,051만 4천 명에 대면 약 234만 명이다.³ 노인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넘는다.

돈의 크기는 따로 세어 본 자료가 있다. 보험연구원은 고령 치매환자 124만 명의 자산을 2023년 기준 154조 원으로 적었다.⁴ 2050년에는 488조 원을 넘는다고 봤다. 이 가운데 자산을 가진 사람은 76만 명이고, 한 사람당 평균

2억 원이다.⁵

2024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순자산은 4억 6,594만 원이었다.⁶

돈이 묶이면 사람이 다친다

돈을 누가 다루느냐는 학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24년 노인학대 신고는 22,746건, 학대로 판정된 건은 7,167건이었다.⁷ 학대한 사람은 배우자가 3,053건으로 38.7%, 아들이 2,082건으로 26.4%였다.

돌보는 사람과 돈을 다루는 사람이 대체로 같다.

돈의 크기는 이미 세어 두었다.
그 돈을 어떻게 쓰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경도인지장애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같은
나이대보다 떨어지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혼자 하는
상태다. 치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머무는
사람도 있다.

일본은 이 숫자를 먼저 세었다

일본 금융청은 2030년 치매 고령자가 가진 금융자산을 215조 엔으로 추산했다.⁸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같은 자산을 2020년 174.9조 엔, 2040년 241.0조 엔으로 추계했다.⁹ 부동산까지 더하면 2040년 348.7조 엔으로 가계 자산의 12.1%다.

<표 1> 판단이 흐려진 사람이 가진 돈은 두 나라 모두 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치매 고령자 수와 보유 자산

기준 시점	치매 고령자	보유 자산	견주는 값
한국 2023년	124만 명	154조 원	국내총생산의 6.4%
한국 2050년 (전망)	공개값 없음	488조 원 넘음	국내총생산의 15.6%
일본 2020년	588만 명	254.8조 엔	가계 자산의 8.2%
일본 2030년 (전망)	공개값 없음	317.5조 엔	가계 자산의 10.4%
일본 2040년 (전망)	811만 명	348.7조 엔	가계 자산의 12.1%

주: 1) 한국의 자산은 보험연구원이 실은 값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언론 보도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¹⁰

2) 일본의 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더한 값이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자산만 따로 2030년 215조 엔으로 추산했다.

3) 두 나라는 조사 방법이 달라 그대로 견주기 어렵다.

자료: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2026),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조사월보(2022), 일본 금융청 사무국 설명자료(2020)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내 계좌가 어느 은행에 몇 개 있는지 목록으로 만든다. 목록이 없으면 나중에 가족이 은행을 하나씩 찾아다닌다.

확인하는 곳 ·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 2 치매보험이나 종신보험이 있으면 대리청구인을 정해 두었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보험사 앱의 계약사항, 또는 종이 증권의 특약 목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후견 절차를 알아볼 일은 아니다. 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2장

금융재산을 관리하는 네 가지 절차

절차와 비용, 그리고 누가 결정하는지를 나란히 놓는다.

검토한 네 가지 절차 가운데 상당수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뒤 시작한다. 임의후견처럼 미리 준비하는 제도의 이용 건수는 아직 적다.

성년후견과 임의후견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에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다. 임의후견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후견인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62,538건

후견 신청 접수 누적

2014~2022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7건

그중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같은 기간 · 전체의 0.3%

562건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 누적

2018년 9월~2024년 4월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금융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대리인 거래, 법원의 성년후견, 공공 재산관리, 미리 체결한 신탁·임의후견 등이 있다. 이용 가능 여부와 권한 범위는 서류와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 적법한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은행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 적법한 대리권과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¹¹ 필요한 서류와 허용 범위는 은행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비밀번호나 인감을 가족에게 알려 주는 것만으로 적법한 대리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접근수단을 공유하면 분쟁과 금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사전에 거래 은행의 대리인 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 법원이 후견인을 정한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법원에 들어온 후견 신청은 62,538건이다.¹² 성년후견이 51,323건으로 82.1%, 한정후견이 5,815건, 특정후견이 5,213건이었다.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은 157건으로 0.3%다.

가족이 나서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을 붙여 주는 길도 있다.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는 2018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62건이었다. 같은 기간 공공후견인 교육을 마친 1,346명 가운데 709명이 활동하지 못하고 기다렸다. 교육을 받은 두 사람 중 한 사람꼴이다.

셋째 · 국가가 재산을 맡아 준다

2026년 4월 22일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됐다.¹³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맡고, 맡긴 사람의 지출 내역을 다달이 살핀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다. 상한은 10억 원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용료가 없다. 받지 않는 사람은 맡긴 재산의 연 0.5%를 낸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일곱 개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서울북부·서울남부·경인·대전세종·광주·대구·부산이다. 2026년 대상은 750명, 예산은 19억 원이다.¹⁴

넷째 · 미리 계약을 맺어 둔다

은행과 신탁 계약을 미리 맺어 두는 길도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이 돈을 받고, 사망 뒤에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넘긴다.¹⁵

돈으로 가입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이 든다. 계약할 때 기본보수를 따로 내는데 1억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이다. 가진 돈이 적은 사람에게는 닫혀 있는 길이다.³⁸

<표 2> 네 가지 길은 결정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판단이 흐려진 뒤 내 돈을 쓰는 방법과 조건

길	누가 정하나	언제부터	드는 돈	맡길 수 있는 재산	되돌리는 방법
창구에서 가족이 인출	창구 직원	그때그때	없음	계좌에 있는 돈	거절하면 남는 길 없음
성년후견	가정법원	심판이 끝난 뒤	감정비와 신청비. 공개값 확인하지 못함	재산 전부	법원에 변경· 종료를 청구
치매안심 재산관리	본인과 국민연금공단	계약을 맺은 뒤	기초연금 수급자는 없음. 그 밖은 연 0.5%	현금성 자산. 10억 원까지	계약 해지. 조건은 미공개
미리 맺는 신탁	본인과 은행	계약한 날부터	기본보수 100만 원부터. 넘길 때 한 번 더	금전·부동산·증권. 돈은 5천만 원 이상	계약에 정한 대로

주: 1) 성년후견에 드는 돈은 사건마다 달라 공개된 표준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2) 신탁 보수는 한 은행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며 은행마다 다르다.

자료: IBK기업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26), 우리은행 상품 안내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내 계좌에 대리인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한다. 등록해 두면 창구에서 실랑이가 줄어든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영업점, 또는 은행 앱의 신고사항 조회

2 치매 진단을 받았고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시범사업 대상인지 상담한다.

확인하는 곳 ·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안심센터 1899-9988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시범 지역이 아닌 곳에 살면 지금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본사업은 2028년으로 잡혀 있다.

거래 제한 기준과 공개 문서

약관과 내부지침에 어떤 기준이 적혀 있는지 구분한다.

약관은 서류를 보라고 하고,
내부 지침은 사람을 보라고
한다. 고객이 계약 상대로 삼는
문서는 앞쪽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예금을 넣고 찾는 절차를
정한 계약서다. 은행과 고객
사이의 약속이라 고객이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내부
지침은 은행이 직원에게
내린 지시라 성격이 다르다.

65세

은행이 고령 고객으로 보는 나이
내부준칙 · 우리은행

80세

판매 뒤 따로 확인 전화를 거는 나이
내부준칙 · 우리은행

2영업일

65세 이상에게 최소로 주는 생각할
시간
투자권유준칙 · 토스증권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판단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약관이 정한 것은 실명 확인, 인감과 비밀번호 신고, 지급과 해지 청구, 사고 신고, 면책이다.¹⁶

예금주가 성년후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정한 조항도 없다.

약관은 사람을 보지 않고 서류를 본다. 비밀번호가 맞고 인감이 맞으면 돈이 나간다. 바꿔 말하면 약관만으로는 돈을 멈출 근거가 없다.

멈추라고 적은 문서는 따로 있다

멈추라고 적은 문서는 은행이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다. 우리은행
고령금융소비자보호내부준칙은 고령 고객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다.¹⁷
나이가 그에 못 미쳐도 사리분별 능력이 크게 떨어져 보이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었다.

상담에서 그렇게 보이면 판매를 자제한다는 문장도 들어 있다. BNK경남은행
지침도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같은 문장을 두었다.¹⁸ 두 은행 모두 만 80세
이상이 조심해야 할 상품을 샀으면 나중에 확인 전화를 건다.

여기서 두 문서가 어긋난다. 약관은 서류만 보라고 하고, 지침은 사람을 보라고 한다. 약관은 고객과 은행 사이의 계약이다. 지침은 은행이 직원에게 내린 지시다. 고객은 뒤쪽 문서를 계약 상대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멈추는 기준은 창구 직원의 눈에 달린다. 어떤 창구에서는 지나가고 어떤 창구에서는 멈춘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두 은행에서 다른 답을 받을 수 있다.

멈춘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내부 지침은 판매를 자제한다고만 적는다. 며칠 안에 다시 불지, 무엇을 확인하면 풀리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은행이 고령 고객의 거래를 실제로 멈춘 건수도 공개된 자료가 없다.¹⁹

증권 쪽에는 그나마 시간이 적혀 있다. 토스증권 투자권유준칙은 고령투자자를 65세 이상으로 정한다.²⁰ 65세 이상이 투자성 상품에 들 때는 이틀 이상 생각할 시간을 주고 판매 과정을 녹음한다.

다만 이것은 새로 사는 것을 늦추는 장치다. 이미 가진 돈을 못 쓰게 된 사람을 위한 장치가 아니다.

<표 3> 멈추라고 적은 문서는 고객이 계약 상대로 삼을 수 없는 문서다

고령 고객의 거래를 멈추거나 늦추는 기준이 실린 문서

문서	나이 기준	정하는 사람	무엇을 멈추거나 늦추나	남이 대신할 수 있는 범위
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	없음	정한 것 없음	멈추는 규정이 없음	신고한 대리인 이름만 적는다
은행 고령금융 소비자보호 준칙	65세 80세	창구 직원	상품 판매를 자제한다. 기간은 적혀 있지 않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계약 사실을 알린다
증권 투자권유 준칙	65세	회사	이틀 이상 생각할 시간을 준다. 판매 과정을 녹음한다	동석 의무 규정은 없다
보험 지정대리 청구 특약	없음	본인이 미리 정함	멈추지 않는다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이 대신 청구
카드 지정인 알림 서비스	65세 이상	본인이 미리 정함	멈추지 않는다	알림만 받는다. 거래를 막지 못한다

주: 1) 다섯 문서 가운데 멈춘 거래를 되돌리는 절차를 적어 둔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2) 은행과 증권은 같은 각각 한 회사의 공개 문서에서 확인했다.

자료: IBK기업은행 약관, 우리은행·BNK경남은행 내부준칙, 토스증권 투자권유준칙, 보험 지정대리청구 안내, 신한카드 서비스 안내를 정리.

성년후견은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다

기존 위임이나 신탁으로 권한을 확인하기 어렵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면 성년후견 심판을 검토할 수 있다. 2023년 6월 4일 금융위원회는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참여했다.²¹

만든 이유가 발표에 적혀 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다. 갈 때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라고 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권한인데도 이유 없이 제한받는 일이 이어졌다.

매뉴얼은 후견인이 이미 정해진 뒤의 절차를 다룬다.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은 다루지 않는다. 창구가 멈춘 그날부터 심판이 끝나는 날까지가 그 자리다.

긴급 의료비 지급의 업권 공통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다

거래 제한 여부는 진단서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확인, 거래 목적, 대리권과 금융회사 보호 절차를 종합해 판단된다. 제한된 뒤 요양원비와 병원비를 지급하는 업권 공통의 공개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일본에는 그 문서가 있다. 전국은행협회는 2021년 2월 「금융거래의 대리 등에 관한 사고방식」을 냈다.²² 성년후견을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이익에 맞는 것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가족의 의료비 지급 요청에 응할 수 있다고 적었다.

확인 방법도 함께 적었다. 본인 면담, 진단서 제출, 주치의에게 듣기다. 진단서가 없으면 여러 직원이 본인을 만나거나 의료비와 요양비 청구서를 확인하라고 했다.

같은 협회는 2022년 5월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대리인이 지급을 요청한 경우를 다룬 문서도 냈다.²³

한국 은행연합회가 만든 같은 성격의 공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²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고객이 창구에서 꺼내 보일 수 있는 문서는 찾아내지 못했다.

일본은 법원이 돈을 돌려 나눈다

일본 가정재판소는 후견을 시작할 때 재산을 돌려 나눈다. 일상 지출에 쓸 돈만 후견인이 예금으로 관리한다. 평소 쓰지 않는 돈은 신탁은행에 맡긴다.²⁵

맡긴 돈을 꺼내려면 법원의 지시서가 있어야 한다. 다달이 보내는 돈도 법원 지시에 따른다. 오쓰가정재판소는 예금이 대략 1,200만 엔 이상이면 이 방식을 권한다고 안내한다.

이렇게 하면 전문직 후견인이 계약 시점까지만 관여해 보수 부담이 가벼워진다.

제도가 시작된 2012년 2월부터 2024년 말까지 신탁을 쓴 사람은 30,618명이다.²⁶ 은행 예금으로 같은 방식을 쓴 사람은 11,501명이다. 예금 쪽은 2018년부터 센 값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거래 은행에 예금주가 판단 능력을 잃으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물어 답을 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고객센터. 답을 문서나 문자로 달라고 하면 기록이 남는다

- 2 부모의 계좌가 있는 은행이 몇 곳인지 미리 센다. 은행이 많을수록 멈출 창구도 많아진다.

확인하는 곳 ·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답을 받지 못했다고 민원까지 넣을 일은 아니다. 은행이 답할 의무를 정한 공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같은 문제를 먼저 겪은 세 나라의 문서를 본다.

일본은 법원이 돈을 나누고,
영국은 미리 정해 두게 하고,
미국은 멈출 수 있는 기간을
규칙에 적었다.

지속적 대리권

영국에서 쓰는 문서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대리인을 정해 등록해 둔다.
재산과 돈을 다루는 것,
건강과 돌봄을 다루는 것 두
가지가 있다.

259,901명

일본 성년후견 등 이용자
2025년 12월 말 · 최고재판소

1,367,053건

영국 지속적 대리권 신청 접수
2024~25년도 · 공공후견청

15명영업

미국이 지급을 멈출 수 있는 기본 기간
규칙 2165 · 금융산업규제청

일본 · 왜 법원에 가는지를 세어 두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해마다 성년후견 통계를 낸다. 2025년 한 해 신청은 43,159건이었다.²⁷ 12월 말 기준 이용자는 259,901명이다. 그중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은 2,833명이다.

신청 동기를 여러 개 고르게 했더니 예금 관리와 해약이 93.4%로 가장 많았다. 신상 보호가 74.2%, 개호보험 계약이 45.7%였다. 열 사람 가운데 아홉 사람이 돈이 묶여서 법원에 간다.

심리 기간도 공개한다. 2개월 안에 끝난 사건이 71.1%, 4개월 안에 끝난 사건이 93.8%다. 한국에는 같은 자리에 놓을 값이 없다.²⁸

후견인의 83.6%는 친족이 아닌 전문가다. 가족이 맡는 비율은 16.4%에 그친다.

영국 · 미리 정해 두는 쪽이 훨씬 크다

영국 공공후견청은 2024~25년도에 지속적 대리권 신청 1,367,053건을 받았다.²⁹ 등록부에 쌓인 건수는 9,340,910건이다.

등록 수수료는 92파운드다. 서류에 잘못이 없으면 8~10주 걸린다고 정부가 안내한다.³⁰ 실제 평균 처리 기간은 49근무일이었다. 목표인 40근무일보다 길다.

영국은 감시도 함께 한다. 같은 해 학대가 걱정된다는 신고가 11,266건 들어왔고, 그중 3,823건을 조사로 넘겼다. 열 건 가운데 세 건이 조사로 갔다.

미국 · 멈출 수 있는 기간을 규칙에 적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규칙 2165는 65세 이상 계좌를 다룬다.³¹ 재산 착취가 의심되면 지급을 15영업일까지 멈출 수 있다. 10영업일을 더 늘릴 수 있고, 규제기관이나 법원에 알렸으면 30영업일을 더 붙일 수 있다. 최대 55영업일이다.

멈춘 뒤에 할 일도 정해져 있다. 2영업일 안에 계좌 권한자와 미리 등록해 둔 신뢰 연락처에 알려야 한다. 2022년 3월부터는 지급뿐 아니라 거래 자체도 멈출 수 있다.³²

규모도 세어 두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17년 한 해의 의심거래 보고를 집계했다. 고령자 재산 착취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63,500건, 17억 달러였다.³³ 70세 이상은 한 사람당 평균 41,800달러를 잃었다. 예금기관이 낸 보고의 66%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아는 경우였다.

<표 4> 세 나라는 미리 정해 두는 문서와 멈추는 규칙을 함께 갖고 있다

판단이 흐려진 사람의 돈을 다루는 네 나라의 방법

나라	미리 정해 두는 제도	이용 규모	창구에서 가족이 뺄 수 있나	걸리는 기간과 비용
한국	임의후견	접수 157건 (2014~2022년)	근거를 적은 공개 문서를 확인하지 못함	후견 심판 기간과 비용 모두 공개값 없음
일본	임의후견	이용자 2,833명 (2025년 말)	은행협회 문서가 의료비 등에 한해 허용	심리 2개월 이내 71.1%
영국	지속적 대리권	등록 누적 9,340,910건	등록한 대리인이 직접 처리	등록 8~10주 · 92파운드
미국	신뢰 연락처 등록	공개값 없음	회사가 55영업일까지 멈출 수 있음	멈춘 뒤 2영업일 안에 통지

주: 1) 네 나라는 제도의 뿌리가 달라 같은 줄의 값이 같은 것을 재지 않는다.

2) 한국의 후견 심판 처리 기간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²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2026), 일본 전국은행협회(2021), 영국 공공후견청(2025), 영국 정부

안내,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규칙 2165를 정리.

네 나라를 나란히 놓으면 한국에 없는 것이 드러난다. 멈출 수 있는 기간과 알릴 의무를 규칙에 적어 둔 나라가 있다. 미리 정해 두는 문서를 900만 건 넘게 쌓아 둔 나라가 있다. 법원이 돈을 나눠 관리 방법까지 정해 둔 나라가 있다.

세 가지 모두 한국에는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거래 은행에 미리 연락처를 등록해 둘 수 있는지 물어본다. 미국은 계좌를 열 때 이것을 받는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고객센터와 영업점

- 2 카드 대출을 쓰는 65세 이상이라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과 누리집의 금융소비자보호 메뉴. 지정인이 동의해야 시작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정인은 알림을 받을 뿐 거래를 막거나 대신 처리하지 못한다. 이것만으로 재산이 지켜지지는 않는다.

5장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새 제도가 닿는 자리와 닿지 않는 자리를 갈라 본다.

750명은 고령 치매환자 1만 명에 6명꼴이다. 시범사업은 크기로 문제를 덮지 못한다.

치매환자가 가진 154조 원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각각 얼마인지는 자료마다 값이 엇갈린다. 그래서 본문에 쓰지 않았다.

750명

2026년 시범사업 대상 인원
보험연구원

19억원

2026년 시범사업 예산
보험연구원

10억원

말길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국민연금공단

새로 생긴 제도부터 크기를 재 본다. 2026년 시범사업의 대상은 750명이다. 2023년 기준으로 고령 치매환자는 124만 명이다. 750명은 그 가운데 0.06%다.³⁴ 1만 명에 6명꼴이다.

하나 · 부동산은 말길 수 없다

말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다. 집과 주식은 빠져 있다. 65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이 4억 6,594만원인 것에 견주면 좁은 범위다.

집을 판 돈은 말길 수 있지만 집은 말길 수 없다. 판단이 흐려진 뒤에는 집을 파는 일부터 어렵다.

둘 · 사는 곳에 따라 갈린다

신청은 일곱 개 지역본부에서만 받는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본사업은 2028년으로 잡혀 있다.³⁵

셋 · 법이 아직 뒤에 있다

보험연구원은 후견과 신탁을 연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가 본사업을 위해 치매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다.³⁶ 현재 시범사업은 관련 법 개정 전에 운영되고 있다.

<표 5> 새 제도는 현금을 가진 저소득 노인에게 먼저 닿는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이 닿는 자리와 닿지 않는 자리

항목	시범사업이 정한 것	닿지 않는 자리
대상 인원	2026년 750명	고령 치매환자는 124만 명
예산	19억 원 · 한 사람당 약 253만 원	상한 10억 원짜리 재산을 다루기에는 작다
말길 재산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집과 주식은 빠짐
신청 지역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	그 밖의 지역은 본사업을 기다려야 함
이용료	기초연금 수급자 없음. 그 밖은 연 0.5%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에게는 해마다 비용
본사업	2028년 예정	근거 법을 고치는 일은 아직 진행 중

주: 1) 한 사람당 예산은 19억 원을 750명으로 나눈 값이다.

2) 이용 대상과 위탁 재산 범위, 상한액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국민연금공단이 밝혔다.

자료: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2026)를 정리.

그러면 무엇을 고쳐야 하나

연구소는 네 가지를 든다. 이 가운데 셋은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거래를 멈출 때의 절차를 약관에 적는다. 지금은 멈추라는 문장이 은행 안쪽 문서에만 있다. 무엇을 근거로, 며칠 동안, 누구에게 알리고 멈추는지를 고객이 읽는 문서에 적어야 한다. 미국은 이 셋을 규칙에 적어 두었다.

둘째, 멈춘 동안 의료비와 요양비를 내는 통로를 문서로 만든다. 일본 전국은행협회 문서가 그 모습을 보여 준다. 무엇을 확인하고 내주는지까지 함께 적어야 창구 직원이 쓸 수 있다. 기준이 없으면 직원은 거절하는 쪽을 고른다.

셋째, 멈춘 건수와 푼 건수를 세어 공개한다. 지금은 은행이 고령 고객의 거래를 몇 건이나 멈췄는지 아무도 모른다. 멈춘 뒤 얼마 만에 풀렸는지도 모른다. 세지 않는 일은 고치기도 어렵다.

넷째, 미리 정해 두는 길을 넓힌다. 한국의 임의후견은 아홉 해 동안 157건이었다. 영국은 한 해에 1,367,053건을 받았다. 두 나라의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격차가 크다. 보험에는 미리 정해 두는 특약이 이미 있다. 은행 거래에도 같은 자리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거래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을 내려받아 후견과 대리인이라는 말을 찾아본다.

확인하는 곳 · 은행 누리집의 약관 모음, 또는 은행 앱의 약관 조회

- 2 치매안심재산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대상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국민연금공단 1355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약관에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해서 오늘 계좌를 옮길 일은 아니다. 확인한 약관에서는 어느 은행이든 사정이 비슷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서류 한 장으로 되는 일부터 적는다. 이 보고서는 특정 상품에 들라고 권하지 않는다.

미리 정해 두는 일은 서류 한 장으로 되고, 되돌리는 일은 법원을 거친다. 순서를 바꾸면 비용이 달라진다.

대리청구인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못할 때 대신 청구하도록 미리 정해 두는 사람이다.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만 정할 수 있고 가입 비용은 없다.

5,000만 원

미리 맺는 신탁에 돈으로 들어가는
최저 금액
한 은행 상품 안내 기준

0.5%

기초연금 비수급자가 내는 연간
이용료율
치매안심재산관리 · 국민연금공단

7곳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판단이 흐려진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적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보다 많다.

미리 해 두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것

- 1 보험 계약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한다. 특약이라 따로 내는 돈이 없다.**
확인하는 곳 · 보험사 앱과 고객센터.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만 지정할 수 있다
- 2 카드 대출을 쓰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카드사 앱. 지정인이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로 동의해야 시작된다
- 3 치매 진단을 받았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재산관리 시범사업을 상담한다.**
확인하는 곳 · 국민연금공단 1355, 치매안심센터 1899-9988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신탁 상품에 오늘 가입할 일은 아니다. 돈으로 가입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이 든다.

이미 멈춘 뒤라면

창구에서 거래를 받아 주지 않았을 때

1 멈춘 이유와 다시 거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적어 달라고 한다.

확인하는 곳 · 그 영업점과 은행 고객센터. 담당자 이름과 날짜를 함께 적어 둔다

2 요양원비와 병원비 청구서를 모아 둔다. 일본 은행들은 이 서류를 확인 자료로 쓴다.

확인하는 곳 · 요양시설 행정실, 병원 원무과

3 후견 심판을 준비한다면 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부터 모은다.

확인하는 곳 · 가정법원 민원실, 치매안심센터 1899-9988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에 돈을 다른 가족 계좌로 옮기지 않는다. 나중에 학대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회사와 당국이 할 일

은행은 이미 내부 지침에 멈추는 기준을 적어 두었다. 그 기준을 고객이 읽는 문서로 옮기는 일은 새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며칠 안에 다시 보고 무엇을 내면 풀리는지까지 적으면 창구마다 답이 달라지지 않는다.

은행 사이에 기준이 다른 문제는 협회 문서 한 장으로 좁힐 수 있다. 멈춘 건수와 풀 건수, 그 사이에 걸린 날수를 해마다 받아 공개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정해지지 않은 것이 셋이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지 적어 둔다.

하나. 치매안심재산관리의 본사업 시기와 맡길 수 있는 재산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평가한다. 그 결과에 집이 들어오는지를 본다.

둘. 은행연합회가 판단 능력이 떨어진 고객을 다루는 공개 문서를 내는지다. 일본은 협회 문서 한 장으로 창구의 기준을 만들었다.

셋. 보험 쪽은 이미 움직였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29일 대리청구인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고 7월 1일 계약부터 적용한다.³⁷ 사람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들어오고 적용 질병도 넓어진다.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 방식이 은행 거래에도 옮겨갈 수 있는지를 본다.

판단능력이 저하된 뒤의 금융거래는 본인 확인과 적법한 대리권, 후견·신탁의 권한 범위, 금융회사의 보호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고객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대리 절차와 거래 제한 후의 이의제기·긴급지급 절차를 공개 문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성년후견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다. 후견인이 재산과 신상에 관한 일을 대신한다.

한정후견

판단 능력이 조금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후견인이 대신한다.

임의후견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본인이 후견인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뒤에 법원이 감독인을 붙이면 효력이 생긴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인이 누구이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 적힌 서류다. 은행 창구에서 이 서류로 권한을 확인한다.

유언대용신탁

살아 있는 동안 본인이 돈을 받고 사망 뒤에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넘기는 신탁이다. 유언장 대신 쓴다.

대리청구인

보험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지 못할 때 대신 청구하도록 미리 정해 두는 사람이다. 가입 비용은 없다.

경도인지장애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같은 나이대보다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은 혼자 하는 상태다. 치매 앞 단계로 본다.

지속적 대리권

영국에서 쓰는 문서다.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대리인을 정해 정부 기관에 등록해 둔다.

후견제도지원신탁

일본에서 쓰는 방식이다. 일상 지출분만 후견인이 갖고 나머지는 신탁은행에 맡긴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확인한 자료는 39건이고 그중 1차 자료가 28건으로 71.8%다. 표지 세 문단과 세 줄 요약, 장 앞 숫자 상자의 값은 모두 1차 자료다. 모든 자료는 2026년 8월 13일에 확인했다.

자료 출처

1. [1차]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보도자료. nps.or.kr
(<https://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0002M1.do?hmpgBbsCd=BS20240145&hmpgCd=01&menuId=MN24000898&pstId=ZZ202600000000000453>)
2. [1차] 보건복지부 「치매 노인 재산관리 지원」 보도자료.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9857>)
3. [1차]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4204>)
4. [1차]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 asemgac.or.kr
(http://www.asemgac.or.kr/bbs/bbs/view.php?bbs_no=76&data_no=10158)
5. [1차] 보험연구원 「2026년 보험산업의 과제: 고령사회」. kiri.or.kr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779839>)
6. [1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repository.kihasa.re.kr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7026/1/%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202024-22.pdf>)
7. [1차] 국가데이터처 「2025 고령자 통계」. asemgac.or.kr
(https://asemgac.or.kr/bbs/bbs/view.php?bbs_no=76&data_no=10865)
8. [1차] IBK기업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file.koreainvestment.com
(https://file.koreainvestment.com/Storage/corporate/elsrate/IBK1_20240801.pdf)
9. [1차] 우리은행 「고령금융소비자보호내부준칙」. spot.wooribank.com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QCCS0083>)
10. [1차] BNK경남은행 「고령금융소비자보호지침」. knbank.co.kr
(<https://www.knbank.co.kr/ib20/mnu/BHPECS020000001>)
11. [1차] 우리은행 「유연대용신탁 상품 안내」. spot.wooribank.com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TRT0043>)
12. [1차] 토스증권 「투자권유준칙」. corp.tossinvest.com
(https://corp.tossinvest.com/static/docs/Investment_Recommendation_2026_01_01.pdf)
13. [1차] 신한카드 「지정인 알림 서비스 안내」. shinhancard.com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helpdesk/financialProtect/appoint/CONF M90094/CONF M90094R01.html>)
14. [1차] 보험 상품안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안내」. idbins.com
(https://www.idbins.com/pc/bizxpress/ct/cp/aa/FWCUSV5129_014.shtm?ct=4)
15. [1차] 금융감독원 「고령자·장애인 금융상품 안내」 보도자료.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3026>)
16. [1차]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추세와 시사점」. kcmi.re.kr
(http://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204)
17. [1차]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FINRA Rule 2165」. finra.org
(<https://www.finra.org/rules-guidance/rulebooks/finra-rules/2165>)
18. [1차]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Regulatory Notice 22-05」. finra.org
(<https://www.finra.org/rules-guidance/notices/22-05>)
19. [1차]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고령자 재산 착취 보고 분석」. files.consumerfinance.gov
(https://files.consumerfinance.gov/f/documents/cfbp_suspicious-activity-reports-elder-financial-exploitation_report.pdf)
20. [1차] 영국 정부 「지속적 대리권 안내」. gov.uk (<https://www.gov.uk/power-of-attorney>)

21. [1차] 영국 공공후견청 「연차보고서 2024-25」 . [assets.publishing.service.gov.uk](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78c0f77ea20916863638b1/opg-annual-report-2024-to-2025.pdf)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878c0f77ea20916863638b1/opg-annual-report-2024-to-2025.pdf>)
22. [1차] 일본 최고재판소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개황」 . [courts.go.jp](https://www.courts.go.jp/assets/20260316koukengaikyoku-r7.pdf)
(<https://www.courts.go.jp/assets/20260316koukengaikyoku-r7.pdf>)
23. [1차] 일본 최고재판소 「후견제도지원실태 이용상황」 . [courts.go.jp](https://www.courts.go.jp/vc-files/courts/2025/20250530sintakugaikyoku_R06.pdf)
(https://www.courts.go.jp/vc-files/courts/2025/20250530sintakugaikyoku_R06.pdf)
24. [1차] 일본 오쓰가정재판소 「후견제도지원실태 안내」 . [courts.go.jp](https://www.courts.go.jp/otsu/vc-files/otsu/file/kouken00koukenseidosiensintakunogoannai.pdf)
(<https://www.courts.go.jp/otsu/vc-files/otsu/file/kouken00koukenseidosiensintakunogoannai.pdf>)
25. [1차] 일본 전국은행협회 「금융거래의 대리 등에 관한 사고방식」 . [zenginkyo.or.jp](https://www.zenginkyo.or.jp/fileadmin/res/news/news330218.pdf)
(<https://www.zenginkyo.or.jp/fileadmin/res/news/news330218.pdf>)
26. [1차] 일본 전국은행협회 「뜻밖의 사태와 예금 지급」 . [zenginkyo.or.jp](https://www.zenginkyo.or.jp/news/2022/n051602/)
(<https://www.zenginkyo.or.jp/news/2022/n051602/>)
27. [1차] 일본 금융청 「사무국 설명자료」 . [fsa.go.jp](https://www.fsa.go.jp/singi/singi_kinyu/market_wg/siryou/20200213/01.pdf)
(https://www.fsa.go.jp/singi/singi_kinyu/market_wg/siryou/20200213/01.pdf)
28. [1차]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조사월보 2022년 5월호」 . [smtb.jp](https://www.smtb.jp/-/media/tb/personal/useful/report-economy/pdf/121_1.pdf)
(https://www.smtb.jp/-/media/tb/personal/useful/report-economy/pdf/121_1.pdf)
29. [2차] 헤럴드경제(2025.5.6). [biz.heraldcorp.com](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80958)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80958>)
30. [2차] 서울신문(2025.5.6). [seoul.co.kr](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5/06/20250506500090)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5/06/20250506500090>)
31. [2차] 아시아경제(2023.6.2). [view.asiae.co.kr](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021540354893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0215403548933>)
32. [2차] 일간NTN(2023.6). [intn.co.kr](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114)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114>)
33. [2차] 경향신문(2026.4.21). [khan.co.kr](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1120000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211200001>)
34. [2차] 오마이뉴스(2026.4). [ohmynews.com](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698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6988)
35. [2차] 메디컬월드뉴스(2026.4). [medicalworldnews.co.kr](https://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73055)
(<https://medicalworldnews.co.kr/m/view.php?idx=1510973055>)
36. [2차] 서울경제(2026.4). [sedaily.com](https://www.sedaily.com/article/20035690) (<https://www.sedaily.com/article/20035690>)
37. [2차] 뉴스웨이(2026.6.29). [newsway.co.kr](https://newsway.co.kr/news/view?ud=2026062909412088046) (<https://newsway.co.kr/news/view?ud=2026062909412088046>)
38. [2차] 아주경제(2026.6.29). [ajunews.com](https://www.ajunews.com/view/20260629102820405)
(<https://www.ajunews.com/view/20260629102820405>)
39. [2차] 광주드림(2026.6). [gjdream.com](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097)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097>)

각주

1.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역학조사」 (1차). ieic.kdi.re.kr · 2026.8.13 확인.
2. 같은 자료.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016년보다 6.17%p 높다.
3. 국가데이터처 「2025 고령자 통계」 (1차). asemgac.or.kr · 2026.8.13 확인. 234만 명은 1,051만 4천 명에 22.25%를 곱한 값이다.

4. 보험연구원 「2026년 보험산업의 과제」 (1차). kiri.or.kr · 2026.8.13 확인. 원 발표는 2025년 5월 6일에 나왔다.
5. 헤럴드경제와 서울신문 두 곳에서 76만 명과 1인당 평균 2억 원을 확인했다(2차). 2026.8.13 확인. 자산 보유자 비중은 매체마다 82%와 61%로 엇갈려 쓰지 않았다.
6. 국가데이터처 「2025 고령자 통계」 (1차). asemgac.or.kr · 2026.8.13 확인. 2024년 순자산 기준이다.
7.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차). asemgac.or.kr · 2026.8.13 확인. 학대 유형별 표는 전제본에 없어 경제적 학대 건수는 쓰지 않았다.
8. 일본 금융청 「사무국 설명자료」 (1차). fsa.go.jp · 2026.8.13 확인. 215조 엔은 금융자산만 센 값이다.
9.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조사월보」 (1차). smtb.jp · 2026.8.13 확인.
10. 헤럴드경제와 서울신문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2차). 2026.8.13 확인.
11. IBK기업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1차). file.koreainvestment.com · 2026.8.13 확인.
12.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1차). repository.kihasa.re.kr · 2026.8.13 확인.
13. 국민연금공단 시범사업 보도자료(1차). nps.or.kr · 2026.8.13 확인.
14.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1차). kiri.or.kr · 2026.8.13 확인.
15. 우리은행 「유연대용신탁 상품 안내」 (1차). spot.wooribank.com · 2026.8.13 확인. 한 은행의 값이다.
16. IBK기업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1차). file.koreainvestment.com · 2026.8.13 확인. 성년후견이나 의사능력 상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없었다.
17. 우리은행 「고령금융소비자보호내부준칙」 (1차). spot.wooribank.com · 2026.8.13 확인.
18. BNK경남은행 「고령금융소비자보호지침」 (1차). knbank.co.kr · 2026.8.13 확인.
19. 은행이 고령 고객의 거래를 멈춘 건수와 그 사이 걸린 기간은 공개된 자료가 없다.
20. 토스증권 「투자권유준칙」 (1차). corp.tossinvest.com · 2026.8.13 확인.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 조항에서 65세 이상을 확인했다. 초고령투자자라는 말과 조력자 동석 의무 규정은 없었다.
21. 아시아경제와 일간NTN 두 곳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2차). 2026.8.13 확인.
22. 일본 전국은행협회 「금융거래의 대리 등에 관한 사고방식」 (1차). zenginkyo.or.jp · 2026.8.13 확인.
23. 일본 전국은행협회 「뜻밖의 사태와 예금 지급」 (1차). zenginkyo.or.jp · 2026.8.13 확인.
24. 은행연합회가 고령 고객이나 판단 능력 저하와 관련해 만든 자율규제와 모범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25. 일본 오쓰가정재판소 「후견제도지원신탁 안내」 (1차). courts.go.jp · 2026.8.13 확인.
26. 일본 최고재판소 「후견제도지원신탁 등의 이용상황」 (1차). courts.go.jp · 2026.8.13 확인.
27. 일본 최고재판소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개황」 (1차). courts.go.jp · 2026.8.13 확인. 신청 동기는 여러 개를 고를 수 있어 합이 100%를 넘는다.
28. 한국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평균 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다. 언론 한 곳이 두 달 이상 걸린다고 적었으나 교차 확인이 되지 않아 쓰지 않았다.
29. 영국 공공후견청 「연차보고서 2024-25」 (1차). assets.publishing.service.gov.uk · 2026.8.13 확인.
30. 영국 정부 「지속적 대리권 안내」 (1차). gov.uk · 2026.8.13 확인. 수수료는 감면 대상을 뺀 값이다.
31.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FINRA Rule 2165」 (1차). finra.org · 2026.8.13 확인. 실제 보류 건수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32.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Regulatory Notice 22-05」 (1차). finra.org · 2026.8.13 확인.
33.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보고서(1차). files.consumerfinance.gov · 2026.8.13 확인.
34. 750명을 124만 명으로 나눈 값이다. 124만 명은 자산 보유 여부를 가르지 않은 수다. 자산을 가진 사람만 세면 76만 명이다.
35. 경향신문 등 네 곳에서 2028년 본사업 계획을 확인했다(2차). 2026.8.13 확인.
36. 보험연구원 리포트(1차)와 광주드림 보도(2차)가 같은 취지다. 치매관리법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37. 뉴스웨이와 아주경제 두 곳에서 같은 값을 확인했다(2차). 2026.8.13 확인.
38. 유연대용신탁의 계약 건수와 가입자 연령 분포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목	판단능력 저하 이후의 금융거래 제한과 대리 절차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07 · NEXUS Research 2026_07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8월 13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판단능력 저하 이후의 금융거래 제한과 대리 절차」, 넥서스 리서치 2026_07, 2026.
수정 이력	2026년 8월 14일 · 대리권, 거래 제한과 긴급지급 절차 표현 교정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료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